



빨리진 검찰수사 항방

# ‘상품권 인증’ 도입 전후 돈 흐름 핵심

‘바다이야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 5개 기관이 수사 대상

수사팀이 넘겨받은 자료에는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발행업체, 발행이 취소된 업체,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사행성 게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섯 곳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부 내 게임산업과, 게임이 심의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상품권 업체를 지정하는 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전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보증보험 등이 해당된다. 검찰은 특히 상품권 발행업체와 사행성 게임기의 인허가 과정에 압력 또는 금품로비 등이 있었는지를 추적 중이다.

## 투서·제보 속속 접수

특별수사팀은 우선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외압 및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해 말 한 상품권 발행 지정업체의 배후에 대통령 측근 인사가 있고 거액의 로비자금이 여권인사에게 건네졌다는 투서를 접수 받은 후 수사에 나서 상품권 업체 대표를 구속했지만 지정 과정에서의 금품로비와 배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서 외압과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 상품권 발행업체 정관계 로비 여부 초점 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 금명 압수수색

검찰은 특히 상품권 제도가 바뀐 시기를 전후해 정관계에 금품 살포가 집중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이 시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경우 의혹의 물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상품권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2월 ▲22개 상품권 인증업체 공고가 이뤄진 2005년 3월 ▲상품권 지정제로 변경된 2005년 7월 ▲상품권 발행업체 19곳을 선정한 2005년 8월~2006년 7월 사이의 돈흐름을 정밀 검토할 계획이다. 업자들의 로비자금이 정관계로 유입됐다면 그 시기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바다이야기가 영상품권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통과한

시점이 2004년 12월28일인데 사흘 만에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가 도입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두 시점의 연관성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영등위원들에 거액 로비설

검찰은 이르면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개발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이 영등위와 개발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우선시 하는 것은 사행성 게임기 허가와 딱지 상품권 허가와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위는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인어이야기 등 투입금의 최대 400배까지

연속으로 상품권을 돌려주는 불법 기능을 탑재한 게임기를 심의·통과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등위 위원들에 대한 거액 로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게임산업개발원의 경우 재지정된 19개 상품권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한차례 승인 취소된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들로부터 게임진흥기금 명목으로 140억원 가량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부실·딱지상품권 업체’를 선정한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의혹에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과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수사과정에서 로비에 연루된 정관계 인물이 적힌 각종 자료가 나올 지도 관심거리다. 이 자료들은 향후 수사에 ‘살생부’가 될 게 틀림없는 만큼 향후 압수수색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명근 문화관광부 장관 등 문화관광부 간부들이 22일 오전 '바다이야기' 업무 보고와 관련, 문광부를 방문한 한영숙 총리의 인사 말을 들으며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권 등 외압 없었다”

### 상품권 수사 맡았던 이형철 광주지검 공안부장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후임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여부가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정치권 개입 의혹은 단지 설(說)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품권 비리 의혹 수사가 그

동안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정치권 외압이 아니라 제이유그룹 횡령 사건이 불거지고, 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상품권 비리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이 부장은 지난해 서울 동부지검 특수부 부부장으로 재직하다 올 2월 부장검사로 승진돼 광주지검 공안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행한도를 초과한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동부지검으로부터 상품권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 문광부 책임론 확산 코너 몰린 정동채의원

### ‘상품권 인증’ 당시 문광부장관 정치권 정척실패 질타 목소리



장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으며 그 계기가 바로 2004년 말 바다이야기의 허가를 내준 것이며 그 사흘 뒤에 상품권이 인증제로 바뀌었다”며 당시 문광부의 정척실패를 꼬집었다.

정동채 의원은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게임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2004년 7월 1일~2006년 3월 26일)을 맡은 데다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와 지정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주무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파문으로 광주지역 최다선(3선)인 정동채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영숙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문광부를 찾아 김명근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사태는 문화관광부의 정책 판단 오류와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 소홀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정 의원이 주무 장관을 맡았던 당시의 문광부를 질책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정동채 의원이 장관을 맡았던 시절의 문광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박영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문광위에서 “2004년에 비해 2005년도에 게임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오찬간담회에서 바다이야기 및 경품용 상품권 의혹에 대해 ‘스캔들’은 아니며 ‘정책적 오류’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지적한 정책적 오류의 책임선상에는 당시 문광부 장관을 맡았던 정동채 의원이 가장 선두에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동채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광부 장관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에 대해 영등위에 5차례나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있었으나 영등위는 독립단체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없었다”는 해명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동채 의원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정치권은 3선 의원 및 장관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성인오락 게임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당시 주무 장관으로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중진 등 현역 의원 9명 상품권 업체서 후원금 받아

여야 중진을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 9명이 경품용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던 신기남 의원과 문화상 의원인 김영현 ㈜삼미 공동 대표와 마의웅 전 ㈜티캐팅 대표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또한 이상호, 유기훈, 이종걸 의원 등도 티캐팅, 한국문화진흥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에서는 경제상 대표가 지난해 6월 박원양 ㈜삼미 공동대표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김정훈, 이계경 의원 등도 삼미, 유기훈, 이종걸 의원 등도 티캐팅, 한국문화진흥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지난 2004년 4월 이희배 ㈜동원리소스 대표에게서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한결같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와는 무관한 순수 후원금임을 강조했고, 일부는 ‘돈을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신중식의 의원은 후원금을 낸 동원리소스 대표는 고등학교 동기며 후원금을 받은 시기도 17대 총선 전이었다며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4~2005년 정치인 고액후원금 기부내역과 경품 상품권 발행업체 주주 및 임원 명단 대조 작업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업체 19개사 가운데 상당수는 주요 주주 및 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후원금 수수 정치인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bo GAGU, featuring office furniture and the website www.hanboGAGU.com.

Advertisement for Torch, featuring office chairs and promotional text.

Large advertisement for Sony products, including a list of items and prices.